

국힘 “민주당 쌍특검·3개국조 공세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

윤재욱 “예산안 대규모 수정 요구는 예산안마저 탄핵하려는 것”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올겨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8일 김건희 여사 주구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검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정기국회 뒤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 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국조를 강행하려는 건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말로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매일 같이 한다면 국민의 존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제공>

국힘 지도부·혁신위 대치전선 계속

내일 ‘희생 혁신안’ 상정 다시 요청 김기현 대표 갈등 진화 방안 고심

총선을 앞두고 ‘주류 희생’을 둘러싼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위는 4일 최고위원회의의 안건 상정이 불발된 ‘지도부·중진·진윤(진윤석열)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합치 출마’ 혁신안을 오는 7일 최고위에 올려달라고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같은 날 회의를 열고 대응책과 향후 활동 방향도 논의하기로 했다.

혁신위의 향후 행보를 두고는 조기 해산과 당 비대행위위원회 구성 요구 등 다양한 사나리오가 거론된다. 혁신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가 조기 해산과 비대위 전환 요구 등의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들면, 혁신위와 지도부의 대립은 ‘정면충돌’ 양상을 띠게 된다. /연합뉴스

이 경우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혁신위가 내놓은 주류 희생, 청년 비례 50% 할당, 전략공천 배제 등이 개혁안으로서 주목받았던 만큼 혁신위의 파행적 퇴장은 이 안건들의 취지마저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지도부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주장하는 톤이 국민들 목소리에 더 가까이에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느냐가 총선 전 여당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택의 ‘키’를 쥐는 김기현 대표의 의중이 관심이 쏠린다.

혁신위가 희생을 요구한 대상자이기도 한 김 대표는 혁신위와 갈등 상황 정리 방안을 계속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尹, 국힘 지도부 오찬...예산·민생법안 野 협조 구하기로

용산 2기 참모들도 참석...“수출현장 밀착 관리, 규제 과감히 혁파”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회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회동에는 김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민생을 챙기도록 정책과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이 사무총장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더욱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이 사무총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이 제60회 ‘무역의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규제를 혁파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고 이 사무총장은 전했다. 참석자들은 또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등 부산지역의 발전을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 등을 논의했다. 세계박람회(엑스포)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유지 실패에 따른 지역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인 지난 10월 18일 오찬 이후 한 달 만이다. 당시는 임명직 당직자들이 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뒤 꾸려진 ‘김기현 2기’ 지도부가 출범한 때였다.

오찬에는 최근 대통령실 개편으로 진영이 새로 꾸려진 용산 2기 참모들도 함께했다. 오찬 식탁에는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당 지도부, 왼쪽에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부수석 등이 자리를 잡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최상목 “역동적인 경제 구축 주력...R&D, 구조개혁 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역동 경제’를 향후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역동 경제가 되려면 과학기술·첨단 기술 발전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개인의 사회적 이동, 계층 간 이동에서 역동성이 갖춰져

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가 없다는 말도 하는데,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보장하려는 것과 무슨 무슨 경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주주 주식양도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라고, 상속·증여세 개편론에는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기에 말하기 어렵고 다만 국제적 기준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각각 언급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정개특위 통과

여야 ‘선거제 개편 교착’ 네 탓 공방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

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또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는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 의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의무를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면 가중 처벌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후보 영상 등의 선거 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예비후보자들이 피켓 등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게 돼 있는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한 규제 개혁성 법안이다.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당헌, 당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정당법 일부 개정안도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2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남부대학교**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복권위원회** **사랑의열매**